

인권과 만난 도시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 들어가며

1) 이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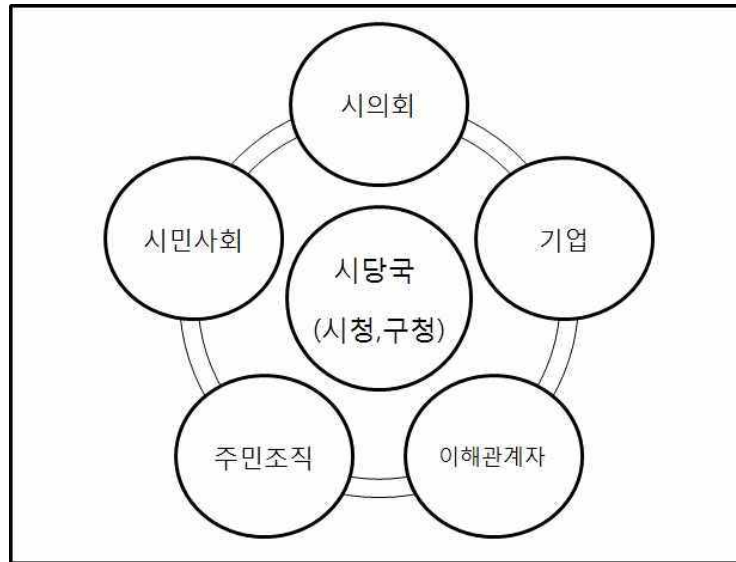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민은 누구이며,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가족, 친구, 동료, 연인. 그들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가진 성인이며 국적자이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으나 또한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공간,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 이 주민, 아동, 철거민, 도시빈민,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빈곤 노인...

“타자로서의 응답 가능성을 상실한 삶을 아렌트는 ‘버려짐(Verlassenheit)’이라고 부른다. 버려짐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자리=장소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은 해당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공적 공간이 암묵적으로 행사하는 배척의 힘은 버려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종 내면화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민주적 공공성 / 이토 준이치)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당시 프랑스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파리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이들이 거주할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파리 근교에 토지를 확보하고 서민들을 위한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그랑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는 프랑스의 기존 도시에서 보기 힘든 고층 아파트로 구성되었는데, 급하게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랑 앙상블은 주택 부족 상황에서 주택 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건설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을 도시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배제시키고 공간적으로 격리시키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 / 강현수) 그랑 앙상블의 슬럼화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는 2005년 이민자 폭동으로 드러난다.

2) 대안으로 등장한 인권도시



인권도시의 주요 행위자와 역할
(2012한국인권회의 ‘도시와 인권’ / 이성훈)

<인권도시에 대한 우려>

“인권도시운동은 거주민들의 ‘합성과 요구’에서 출발할수록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인권도시운동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합성과 요구를 듣고 있는지, 합성과 요구가 들릴 수 있는 자리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음. 이것이 불투명한 채로 ‘참여’만 강조할 때 ‘참여’는 차라리 배제의 다른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의 주체와, 참여의 주체이면서 독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은연중에 구분되는 ‘참여’는 위험함.”(2012한국인권회의 ‘도시와 인권’ / 미류)

2. 제도와 정책 추진시기

수원시는 2013년 2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같은 해 7월 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 인권위원회 1기를 위촉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을 진행했으며 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산하기관과 위탁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진행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제도 및 시스템과 정책, 인권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 인권 인프라 구축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2014년 5월부터 10월, 5개월간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수행기관은 수원시정연구원이었으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6년 인권정책(계획·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예정하고 있다. 3단계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중이다.

그 외 수원시는 초중고, 청소년, 다문화, 시민 등 협력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5년 2월경 수원시인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3. 쟁점과 현안

1) 미술관 명칭을 통해서 본 공공성 문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름 바꾸라”¹⁾

‘수원시민 미술관을 고민하는 사람들’ 기자회견 열고 성명 발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미술관 명칭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돼”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수원 화성행궁 앞에 들어설 미술관의 이름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수원시민 미술관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수원 화성행궁 앞 미술관 공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일부터 미술관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770여 명의 각계인사가 연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사이에 형성된 공공성>

“우리의 삶의 위상이 복수이듯이, 공공성도 복수의 차원을 가진다. 우리가 하나의 삶/생명의 위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공공성도 어떤 하나의 차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욕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해석하고 공통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고 자신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세계의 일부를 타자가 보여주기를 기다린다. 우리 ‘사이’에 형성되는 공공성은 그러한 몇 개의 차원에 걸쳐 있다. (민주적 공공성 / 이토준이치)

2) 경진여객 사태를 통해서 본 노동권과 집회시위자유, 버스 공공성

수원시청 화단공사,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이유²⁾

다산인권센터 “화단·구조물 설치, 집회·시위 원천봉쇄”... 수원시 “환경미화“

경기 수원시가 최근 시청사 정문 앞 왼쪽 공간에 대형 화단과 구조물을 설치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환경미화라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의도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주말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시청 정문 왼쪽 시청계시관 앞 일대에 대형 화단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는 최근 철수한 해고노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농성에 이은 또 다른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앞서 버스회사인 경진여객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다 해고된 박아무개 노조위원장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원시청 정문 왼쪽 시청계시관 앞에서 “수원시가 경진

1) 대안미디어 너머 2014. 12. 12.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

여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박 위원장 등은 농성을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농성 첫날부터 수원시의 대응은 강경했다. 농성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비닐천막을 설치하자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십여 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3) 강력사건과 안전, 그리고 인권

‘오원춘 악몽’ 재연…수원시 안심대책 마련³⁾

수원시는 5일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돼 시민이 불안해하자 서둘러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4월 수원시 지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당시 42)의 20대 여성 토막 살해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소집,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고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우범지역, 골목길, 공원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순찰을 시행하고 특히 사건이 발생한 팔달산 주변에 대해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공원이나 뒷골목 등 취약지역 리스트를 작성, 특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화성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등 야간 조명 시설도 즉각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난을 엄벌하다>

“톨레랑스 제로”의 과급으로 ‘시장주의-사회 보조 축소-형벌 확대’가 한데 몰려 있는 정책형태가 더 넓은 국제시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규제 완화, 복지 예산 축소라는 ‘워싱턴 합의’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형벌국가라는 강철 주먹으로 포로노그래피성의 통제주의성의 열쇠를 쥐고 범죄 정책까지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2) 오마이뉴스 2014. 04. 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857

3) 중부일보 2014. 12. 05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234>

4) 삼성 우수토고 물고기 집단 폐사와 시민 안전

수원 원천천 물고기 떼죽음...”삼성전자 원인 추정”⁴⁾

삼성전자, 방류 시작후 물고기 떠오르자 인력 투입해 급히 수거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하천 부근에서 31일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시 당국과 환경단체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천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종의 어류가 몰살을 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경악스러운 상황이다. 물고기 수만 마리가 폐사한 곳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천 삼성 중앙교 부근에서부터 하류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백년교 구간 사이에 집중 분포했다.

삼성 중앙교 하천에 연결돼 있는 삼성전자의 우수관(토고)를 기점으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가 백년교까지 긴 고리를 형성했다. 삼성전자 토고는 세로 1.3m, 가로 1m 크기로 하천변 담장에 설치돼 있다. 환경단체는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삼성전자 토고로부터 나온 방류수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현장에 도착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이오이 사무국장은 “현장에 도착해 백년교부터 훑고 올라갔는데 하천바닥에 치어부터 다 죽어있었다. 손바닥 만한 물고기부터 말조개까지 다 떠올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원천천에 서식하는 붕어,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말조개 등 모든 어종이 몰살을 당했다. 경악스러운 정도로 너무 많이 죽어서 놀랐다”고 현장의 참혹함을 전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이 시작됐던 시점은 삼성전자가 우수관을 통해 방류를 시작한 이날 오전부터라고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컴팩트란?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 컴팩트의 10대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천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기업은 세계적 원칙에 기반을 둔 기업전략 및 사회신념을 통해 세계경제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포괄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무역과 투자는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기업은 착취적 관행, 부패, 소득 불평등, 혁신과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장벽과 같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투명하고 건설적인 기업문화는 신뢰

4) 뉴스와이 2014. 10. 31

<http://www.mediawh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24>

와 사회적 자본을 쌓으며 폭넓은 기반의 발전과 지속가능 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 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12.htm>)

4. 과제

1) 수원시 인권 정책의 과제

<토대의 변화와 행정체계의 변화, 기획사업과 인권현안 대응 등의 박자가 잘 맞아야 함>

- 수원시 공무원사회의 변화(인권 감수성 확대, 인권행정의 필요 공감대 형성)
-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
- 의사결정 과정의 민관 파트너십 관계 형성의 중요성
- 인권정책 홍보와 기획력있는 사업의 필요성

2) 현안과 쟁점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아직 수원시 인권행정은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
- 향후 첨예한 인권현안과 만나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중요
- 현재까지 인권현안과 만났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음
- 지자체 등 행정에서 인권은 보편성 담론보다 구체적 쟁점의 모습일 가능성이 더 높음
- 시민참여, 기존 행정과의 조화

5. 나오며

인권도시의 경험은 아직 쌓이지 못했다. 인권 브랜드는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행정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다. 실제로 인권행정이 구현되고 시민들의 삶이 인권친화적이며, 도시 소수자들이 인권행정의 수혜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담론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첨예하게 불화하는 인권현안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다. 때로는 의지의 문제이고 때로는 구조의 문제, 때로는 감수성의 문제이며 많은 순간 인내와 논의, 민주주의의 실험으로 가능할 것이다.

〈별첨〉

수원시 인권제도 구축 및 정책 추진상황

□ 지방자치단체 조례 · 부서 설치현황

구 분	계	광역시 이상 (17)	기초 시·군·구 (226)	비 고 (미지정)
조례제정	64	14	50	179
위원회 설치	17	7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전, 충남, 강원도)	10 (수원, 성북, 해운대구, 울산동구, 광주남구, 광명시 등)	
전담 부서설치	12	2 (서울, 광주)	10 (수원, 성북구·영등포·서대문 광주북구·남구·동구·북구·서구· 광산구)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①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 2013. 2. 15 : 인권전담부서 설치(안전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 인권팀)
- 2013. 7. 31 : 수원시인권기본조례 공포(제3236호)
- 2013. 9. 3 :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 자문단 회의(3차)
- 2013. 11.13 : 수원시 인권위원회(제1기) 위촉
- 2014. 8. 25 : 수원시 인권위원회(결원) 위촉/ 박순영, 김은수 의원

② 인권위원회 운영

계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소통회의	세미나
18회	3	4	3	7	1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회의) : 정기회/ 4회, 임시회/ 필요시

• 주요 활동내용

- 수원시 인권제도 및 시스템 정책
-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
- 수원시 인권 인프라 구축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수원시 민·관 협력 인권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공공부문 및 인권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 공직자 인권감수성 교육(수요 인권교실) : 15회 835명
- 수원시의회 의원·사무국직원 인권교육(2014.2.7./해운대의정연수) : 1회 58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영통복지관, 산하단체,요양원 등) : 11회 636명

※ 2014. 11월~12월 : 복지관, 비전업청소년학교, 요양원 종사자 교육 16회
350명 추진 중

④ 인권증진 민·관 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14. 6월 ~ 12월
- 사업분야 : 인권교육 및 증진사업
- 사업선정 : 6개 사업(초·중학교, 청소년, 다문화, 시민 등)
- 주요내용 : 계층별 맞춤형 인권교육, 장애인당사자 인권강사양성 전시회 등
- 사 업 비 : 29백만원(1개사업당 5백만원 이내)

※ 초·중고 학교 인권교육

⑤ 인권실태조사 추진

- ▶ 1단계(2014년) : 인권실태조사 연구 용역
- ▶ 2단계(2015년) : 인권기본계획 수립
- ▶ 3단계(2016년) : 인권정책(계획·이행사항 모니터링)

[사업개요]

- 용역명 :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 5. 12. ~ 10. 11. (5개월간)**
 - 수행기관 : (재)수원시정연구원
 - 과업범위 : 사회적 약자 중심(**5개분야** :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 수원시 인권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시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시민 500명, 공무원 500명)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실태 조사(FGI 105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12~2016) 우리시 도입과제 제시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비전과 방향 제시
 - 사업비 : 50,000천원(계약 49,500천원)
- ※ 인권자문단 별도 구성[시정연구원], TF팀 구성[시 관련부서팀장]

[추진상황]

- 2014. 5.12 :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계약(수원시정연구원)
- 2014. 5.29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제1부시장 주재)
- 2014. 6.19 : 실무TF팀 회의개최(관련업무 팀장 24명)
- 2014. 9. 1 : 중간보고회 개최
- 2014.10. 2 : 최종보고회 개최
- 2014.10.12 : 연구용역 완료

【향후계획】

-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2015. 3 ~5월(범위:2016~2018/3년)

⑥ 수원시인권센터 개소 준비

【센터운영 개요】

- 개소시기 : 2015. 2월
- 센터형태 : **직영체계(미래비전과 인권팀)**
- 센터장소 : 수원시 별관 7층(보육아동과 옆 유휴 공간/ 10평 규모)
- 센터명 : 수원시인권센터/시청사 내
- 소요인원 : 전문 상담·조사관 2명 보장(일반임기제 공무원)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원				임기·시간제 공무원		
		소계	6급	7급	89급	소계	6급	7급
현 재	3	3	1	1	1	—	—	—
변 경	5	3	1	1	1	2	1	1

【추진상황】

- 2014. 9. 5 : 수원시인권센터설치·운영 방침결재(시장님)
 - 2014. 9.11 : 관련부서(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회계과)협조요청 공문발송
 - 2014.10.12. : 자치행정과(조직팀)과 협의
- ⇒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2014. 12월 초)/채용소요 기간 약2개월 소요

【향후계획】

- 2014. 12월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센터운영관련 사항)
- 2014. 12월 : 인권센터개소 준비(사무실·상담실 설치)
- 2015. 2월 : 인권센터개소 및 인권관련 상담 언론 홍보강화